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스토킹 입법의 한계와 개선방안*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박보람 법률사무소 비움 변호사

1. 서론

오랜 논의 끝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공포되어 올해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간 스토킹은 당사자들의 관계에 따라 개인적으로 해결할 문제로 치부되거나 기껏해야 경범죄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데 그쳤다. 스토킹으로 일상의 지속적 불안을 경험하더라도 경찰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드물었고, 대응의 법적 근거도 부족했다. 과거 또는 현재의 데이트 관계나 배우자 관계, 혹은 일방적으로 애정이나 관심을 요구하는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 및 살인 사건에서 스토킹이 선행되었던 상황이 드러나면서 젠더기반 폭력으로서의 스토킹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스토킹을 범죄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방안이 모색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제정된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의 정의와 스토킹범죄 처벌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경찰의 응급조치 및 긴급응급조치, 법원의 결정에 따른 잠정조치 등 형사처벌 외의 대응을 도입하였다. 처벌법의 제정 이전에도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상담, 법률지원 등의 지원 방안이 모색되었다. 그러나 스토킹 입법은 여러 한계를 안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이 포괄하는 스토킹의 범위는 좁고 보호 대상이 제한적이며 가해자에 대한 제재 수단이 부족하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 지원은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사건 처리 외에도 스토킹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을 보호·지원할 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확인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현행법과 지원체제의 한계를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이 글은 다음 보고서를 요약 또는 발췌하여 구성하였음을 밝힌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보고서를 참고할 것. 김정혜·박보람·정다운,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1.

2. 스토킹의 정의

「스토킹처벌법」에서 스토킹행위는 스토킹범죄와 구분되는 개념이다. 스토킹행위에 대해서는 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고,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되어(제2조 2호)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법원의 잠정조치도 가능하다. 스토킹행위는 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② 정당한 이유 없이, ③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④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기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 전화, 팩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이하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⑤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제2조 1호).

스토킹의 정의 조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접근하거나 피해자에게 물건을 도달하도록 하는 행위를 중심으로 한 5개 유형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스토킹이 상대방에게 감시당하거나 추적당하고 있다고 느끼도록 하여 생활상의 평온을 해치는 일체의 행위임을 감안하면, 열거적 규정 방식은 한계가 뚜렷하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자신의 SNS에 피해자의 일상을 지속적으로 게시하거나 피해자를 사칭하는 계정을 생성하고 피해자의 전화번호·주소 등 정보를 게시하여 제3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영상기록장치·음성인식장치·GPS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감시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등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야기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에 대한 접근이나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는 것이다.

스토킹이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일어날 수 있고, 행위 방법과 무관하게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야기하는 행위에 개입하고자 한다면, 열거된 행위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이에 준하는 행위’와 같이 보충구성요건을 두어 처벌의 흠결을 방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보충구성요건을 두더라도 너무 좁게 해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시 유형도 좀더 보완하여야 한다.

스토킹의 행위자와 상대방의 범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스토킹은 피해자의 동거인이나 가족 외의 주변인에 대해서도 행해질 수 있고 스토킹의 고의가 없는 여러 명의 제3자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제2조 1호 라목) 외에도 제3자를 통한 행위를 포함하도록 하고 스토킹의 상대방은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스토킹행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이 요구되고 있으나 반의사는 정당한 이유 없음, 불안감이나 공포심의 야기 등의 요건과 내용상 중첩되고 형법상 피해자가 승낙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으므로 삭제하여도 무방하다고 본다. 이를 반영하여 다음 <표 1>과 같은 개정안을 제안한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대상 또한 「스토킹처벌법」이 정한 스토킹행위의 좁은 정의에 제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피해자 보호·지원은 신고나 기소 여부, 재판의 결과에 좌우되지 않고 수행되어야 할 뿐 아니라 스토킹 가해자에게 직접적인 부담을 주지 않으므로 「스토킹처벌법」의 정의를 준용하는 대신

〈표 1〉 스토킹행위의 정의 개정안

현행 「스토킹처벌법」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p> <p>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p> <p>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p> <p>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p> <p>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p> <p>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스토킹행위”란 정당한 이유 없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상대방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p> <p>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p> <p>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p> <p>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p> <p>라.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상대방을 위한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p> <p>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p> <p>바. 상대방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감시 또는 추적하거나 감시 또는 추적당하고 있다고 상대방이 느끼도록 하는 행위</p> <p>사. 상대방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사칭하거나 상대방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활용하는 행위</p> <p>아. 상대방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정보를 권한 없이 변경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p> <p>자. 상대방의 개인정보나 사진, 영상, 그림, 음성, 또는 이와 유사한 상대방을 식별할 수 있는 콘텐츠를 타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p> <p>차. 반려동물 등 상대방이 돌보는 동물이나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동물학대 행위</p>

〈표 2〉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에서 ‘스토킹’의 정의(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스토킹”이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상대방 또는 상대방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생명, 신체, 생활상의 안전을 위협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p>
--

별도의 일반적 정의 규정을 두어 지원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3. 사건 처리 과정에서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면서, 가정폭력과 유사

하게 사법경찰관리는 스토킹행위 신고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하고(제3조), 사법경찰관은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접근금지의 긴급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제4조),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서면경고, 접근금지, 유치장·구치소에의 유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어(제9조), 그동안 스토킹 대응에서 공백

부분이었던 조기 개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가 도입되어(제17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 역시 마련되었다. 그러나 스토킹의 특수성과 양상을 반영한 보호·지원제도가 새롭게 마련된 것은 아니고, 기존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피해자 보호 제도도 충분히 도입되지 않아 피해자 보호에 공백과 균열이 있다.

가. 응급조치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제도는 처벌법에서 정의하는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전제로 한다. 2절에서 본 것과 같이, 법에서 규정하는 스토킹행위 자체가 협소하여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행위 유형에 의한 행위자에게는 위 조치를 취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선 스토킹행위의 정의 규정을 확대하여 응급조치 등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스토킹은 그 상대방뿐만 아니라 주변인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직접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접근하는 행위도 직접 상대방에 대한 접근과 유사하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일으키므로 주변인을 보호할 필요성이 높다. 그런데도 조치 대상의 범위는 스토킹의 상대방(긴급응급조치)과 피해자(잠정조치)에 한정되어 있어, 가족이나

동거인 등 신고된 행위의 상대방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막을 수 없다. 한편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에 열거된 조치 내용은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와 같은 특정한 양태만을 열거적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술의 전환에 따라 나타나는 새로운 양태의 피해를 고려하기는커녕 현재 「스토킹처벌법」이 규정하는 스토킹행위마저 포섭하지 못하고 있다. 스토킹행위가 지속·반복되거나 더 심각한 범죄로 확대되기 전에 공권력 개입으로 통제하여 적절한 보호조치가 되기 위해서는 1) 조치 대상의 보호범위를 상대방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2) 보호조치의 내용을 열거적인 형태가 아니라 예시적인 형태로 규정하여 스토킹 행위 양태의 다변성과 피해자 및 가해자의 구체적인 관계, 상황을 고려하여 사안에 적합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¹⁾ 법원의 잠정조치는 유치장·구치소에의 유치까지 명할 수 있는데, 행위자에게 이보다 더 침해적인 조치를 상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개방적인 형태로 규정하는 것이 구체적인 사안에서 적절한 조치를 고려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법원의 결정에 따른 잠정조치 위반에 대하여는 처벌 규정이 있으나, 경찰 단계에서 발동할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 위반에 대하여는 과태료 규정만 두고 있을 뿐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것도 문제적이다. 이미 「가정폭력처벌법」 상 긴급임시조치 위반에 대해 과태료 처분만 규정되어 있어서 접근금지 등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하더라도 즉각 개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는데, 이는 「스토킹처

1) 영국의 「스토킹 보호법 2019(Stalking Protection Act 2019)」는 스토킹 보호명령(stalking protection order)의 내용을 한정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스토킹 관련 위험으로부터 상대방 보호를 위해 필요한 금지사항이나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개방적으로 규정한다. Stalking Protection Act 2019,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19/9/contents/enacted>, 검색일자: 2021. 9. 16.

별법」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경찰 단계의 긴급응급조치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위반을 형사범죄화하여, 경찰의 실효적인 개입을 가능케 할 필요가 있다.

나. 피해자 보호명령

응급조치 등과 달리, 「스토킹처벌법」에는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와 같이 피해자 등이 법원에 직접 신청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는 도입되지 않았다. 긴급응급조치나 법원의 잠정조치는 접근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과 유사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모두 행위의 신고에 따른 수사절차의 발동을 요하고, 잠정조치의 기간은 기본 2개월, 최대 6개월에 그친다는 점(제9조 제5항)²⁾에서 피해자 보호가 미흡한 한계가 있다.

이에 피해자보호명령 제도와 그 위반에 대한 불이행죄를 도입하고,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에서 제언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호대상의 범위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까지 확대하며, 보호명령의 내용도 개방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장기간 지속되는 스토킹 비율도 낮지 않으므로,³⁾ 연장 가능한 최대 기간을 「가정폭력처벌법」과 동일하게 3년 이하로 하거나 그 이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다. 신변안전조치와 개인정보 보호

스토킹은 기본적으로 행위자가 피해자에 접근하는 양상을 띠므로, 추가적인 접근과 피해의 확대를 막

기 위하여 사건 처리 절차상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신변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토킹처벌법」은 신변안전조치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스토킹과 관련하여 신변안전조치를 받으려면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경유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일 것, “형사소송절차에서 한 진술이나 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것 등이 요구된다(제9조 제2항). 스토킹 피해를 안심하고 신고하고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신변안전조치를 도입하여야 하며, 보호의 필요성은 조기부터 인정되므로 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한해서가 아니라 스토킹행위의 상대방까지 신변안전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신고된 초기부터 스토킹행위 상대방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이하 ‘범죄신고자법’)」상의 인적사항 기재 생략, 인적사항 공개 금지, 신원관리카드의 열람, 증인신문 등의 영상물 촬영, 증인신문 비공개, 소송진행의 협의 등을 도입하여 정보 보호를 구체적으로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는 형사절차에 국한되는 것인바, 피해자가 피해의 전보를 받을 수 있도록 민사 재판 절차에서도 유사하게 비밀명 사건 처리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라. 정보제공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은 피해 보호를 수동적으로 받는 수혜자가 아니라, 지속적·반복적 접근이라는 스토킹 사안에서 생활을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기획

2) 「가정폭력처벌법」상 피해자 보호명령의 기간은 기본 6개월, 최대 2년이었다가 2020년 10월 개정에서 기본 1년, 최대 3년으로 더 확대되었다(제55조의3).

3) 이수정 외(2021)의 스토킹 피해 경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토킹 피해 지속 기간은 대부분 1년 이하이지만, 3년 이상인 경우도 9.8%로 장기간 지속되는 스토킹의 비율이 결코 낮지 않음을 보여준다(이수정 외, 2021, p. 67).

하고 실행하며, 적절한 보호조치를 고려하는 주체이다. 따라서 스토킹행위 상대방이 가해자의 신병과 사건처리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피해자 등은 고소·고발 사건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신청을 한 경우에만 사건의 주요 사항을 통지받을 수 있고 그나마 통지 사항도 공소제기 여부나 재판 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금에 관한 사실 등에 한정되어 있다(「형사소송법」 제258조, 제259조의2). 또한 수사진행상황의 통지에 대해서도 법률에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① 「범죄신고자법」에 준하여 통지 주체로 검사뿐만 아니라 경찰을 포함하며 ② 원칙적으로 통지를 의무로 하고, ③ 통지 사항에 수사 및 재판에 관한 상황뿐만 아니라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의 진행 상황 전반을 포함하여 스토킹행위 상대방의 정보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4.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스토킹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이 마련되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스토킹의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의 지속을 방지하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 회복을 지원할 의무가 있음을 법률상 명확히 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스토킹 신고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스토킹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교육·홍보를 실시하는 것, 피해자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피해자 지원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피해자 지원 관련

기관의 협력 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것, 스토킹의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평가하는 것은 여타의 젠더폭력 대응 정책에서도 기본적인 책무에 해당하는 사항들이다.

이에 더하여 스토킹이 피해자의 안전과 생활상의 평온을 위협하고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성하며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다는 점, 과거 또는 현재의 친밀관계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스토킹 가해와 피해가 더욱 확장될 수 있다는 점, 피해자 본인만이 아니라 가해자가 피해자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피해자 주변 사람들, 피해자를 보호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상당한 범위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스토킹의 주피해자와 스토킹 상대방의 안전 확보, 피해자 지원자의 안전 확보,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체계의 구축도 요청된다.

또한 스토킹은 지속적으로 안전과 자유를 위협하고 생활상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에게는 안전과 생활상의 평온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특성이 있다. 이는 단지 스토킹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소극적·방어적인 피해의 방지 및 회복 조치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생활상의 평온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 확보와 생활상의 평온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 스토킹 처벌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서의 방향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의 안전 확보와 생활상의 평온 보호를 위한 조치에는 피해자의 신변보호 관련 조치, 일상 필수 활동의 동행, 일시보호, 주거이전비 지원, 피해자의 생활공간의 보안 강화를 위한 도구

의 지원 또는 구입설치비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나. 피해자 보호·지원 기관

여성가족부는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이주여성 상담소 및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에서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스토킹은 동기, 행위 방법, 가해자의 유형,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특성 등에서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 스토킹이 젠더폭력, 친밀관계폭력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고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이 높은 특성이 있기는 하지만(이봉한, 2011, p. 128; 이진호 외, 2002, pp. 75~78; Monckton et al., 2017, p. 8) 모든 스토킹이 젠더폭력의 맥락에서 다루어질 수는 없으며, 스토킹이라는 특유한 행위 유형에 대응할 전문성도 요청된다.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만으로는 지원이 필요한 스토킹 피해자를 모두 포괄하기 어렵고, 젠더폭력과 무관한 스토킹 피해자 지원이 자칫 젠더폭력 피해 지원기관의 업무 부담을 가중하거나 젠더폭력 피해 지원이라는 기관의 특성을 약화시킬 우려도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성폭력에 수반되는 스토킹 피해에 대한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서의 지원과 더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스토킹 피해자 전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하는 민간 기관과 협력하며 내용상, 재정상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이진호 외, 2002, p. 175; 원민경, 2017, p. 75). 단기적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스토킹 피해자 전담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지원센터 내에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을 두며

경찰과 지리적, 업무적으로 긴밀한 연계를 통해 입소자의 신변보호를 강화하도록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전담하는 민간 기관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함으로써 지원체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스토킹 피해자 전담 지원센터는 스토킹에 대한 상담과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 업무, 거주지 밖에서의 보호가 필요하지만 가정폭력, 성폭력 등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스토킹 피해자 지원 및 복지 지원, 지역사회 자원 등의 연계, 위험성 평가, 안전 계획 수립 및 피해자에 대한 안전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업무는 성별권력관계에서 비롯된 구조적 젠더폭력으로서 스토킹을 해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역량을 필수로 요청한다.

스토킹 피해자 전담 지원센터는 또한 스토킹 피해의 중앙 지원센터로서, 아직 스토킹의 개념과 범위·심각성·대응 방법 등에 대한 지식 공유가 부족한 현실에서, 일반 시민과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스토킹에 대한 안내 자료의 제작·배포, 스토킹 피해자 지원 인력과 스토킹 사건을 처리하는 수사기관 및 형사·민사·가사법원, 교정기관의 담당자들을 위한 교육 자료의 제작과 교육 또는 교육 지원, 각 기관의 스토킹 사건 처리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자문, 기업, 대학 등 조직에서 어떤 지침을 갖고 스토킹 피해자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수립 지원, 스토킹에 대한 조사·연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다. 피해자 보호지원 내용

여성폭력 또는 범죄로서 스토킹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지원할 의무가 있다. 스토킹 피해자에 대하여 스토킹의 속성을 이해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상담, 심리상담, 스토킹의 위험성 평가와 온라인·오프라인에서의 안전 계획 수립을 지원해야 하며, 피해자가 스토킹으로 인하여 직장을 잃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거나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돌보는 가족구성원 등이 거주지·직장·학교 등을 옮겨야 하는 상황에서는 긴급생계지원, 주거지 이전 지원, 단기 혹은 중장기적인 보호나 주거 지원, 취학 지원, 취업 지원 등을 하여야 할 것이다.

취학 지원의 범위는 피해자와 가족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는 것보다는 피해자의 스토킹 피해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야 실질적인 보호를 달성할 수 있다. 취업 지원 역시 실질적 보호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스토킹은 피해자의 주변인들에게 피해가 확산되기 쉽고, 스토킹으로 인해 주거 지역을 이전할 경우 피해자뿐 아니라 생계와 주거를 함께 하는 가구원들이 같이 이동하면서 일자리에 영향을 받게 될 수 있으며, 부양자인 스토킹 피해자가 스토킹으로 부양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피부양자 중 누구라도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 스토킹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스토킹으로 인하여 취업 지원이 필요하게 된 사람을 포괄하여야 한다.

스토킹 피해자에게 스토킹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치료에 대한 의료 지원이나 법률상담 및 정보 제공, 고소,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형사·가사

사건의 법률 지원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또한 온라인 스토킹에 대한 대응으로서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유포하거나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정보를 게시하는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스토킹의 흔적에 대한 삭제 요청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해자가 스토킹으로 인하여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하는 보호 조치도 필요하다. 스토킹이 직장 내 관계에서 발생하였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 업무 외 관계에서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가해자가 주피해자 및 피해자 주변인의 직장에 찾아가거나 다른 근로자를 위협하는 등 스토킹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피해자가 사건 처리 절차의 진행이나 피해 회복 과정에서 정당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등 여러 상황에서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스토킹 피해자는 스토킹 피해에 더하여 경제적 위험에 처하고 고립되기도 한다(원민경, 2017: 73; 김숙희 외, 2019: 44~45). 이와 유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별이나 괴롭힘, 여성폭력 등과 관련한 여러 법률에서도 피해자 및 신고자에 대한 일터에서의 불이익 금지 조항을 두고 위반 시 처벌하고 있다. 스토킹 피해자 및 신고자 또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유사 조항들을 참고하여 스토킹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의한 불이익을 비롯하여 그 밖의 불이익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특히 사용자가 피해자 및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벌칙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직장에서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는 것이 소극적인 피해자 보호라면, 단지 불이익 금지를 넘어서 피해자가 스토킹 피해에서 벗어나고 평

온한 일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적극적 보호에 해당한다. 스토킹 피해자에 대하여 직장에서 휴가 부여, 근로시간 단축, 근무 장소 변경, 근무 시간 변경, 배치전환 등이 이루어진다면 경제적 위험에 처하지 않고도 스토킹의 중단을 위한 조치와 피해 회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⁴⁾ 「근로기준법」 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피해자에 대한 보호휴가 등 사용자의 보호 조치 의무 조항을 두고 이를 스토킹뿐 아니라 성폭력, 가정폭력, 그 밖에 사용자의 보호가 필요한 피해

에까지 적용하는 방식이 법체계상으로도 더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입법 현실을 고려하면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에서 먼저 사용자의 보호의무를 두어 그 필요성을 확인하고 점차 다른 피해에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스토킹 관련 불이익을 금지하는 경우, 스토킹과 관련된 조치를 요청하거나 활용하는 것을 이유로 한 불이익은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참고문헌 •

- Monckton Smith, J., Szymanska, K., & Haile, S.,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talking and Homicide*, Suzy Lamplugh Trust, 2017.
- 김숙희·김현아·서혜진·안서연·이수연·이시정·이지연·장경아, 「발제: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조치의 실질화 및 강화」,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 바라본 스토킹처벌법 제정안의 문제점』, 한국여성변호사회, 2019.
- 원민경, 「데이트폭력·스토킹 사건처리 전반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데이트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 방안』,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7.
- 이건호·김은경·황지태, 『스토킹 피해실태와 입법쟁점에 관한 연구』, 여성부, 2002.
- 이봉한, 「스토킹피해자의 인식과 대응실태에 따른 경찰활동방안」, 『한국경찰연구』, 제10권 제3호, 2011.
- 이수정·강지은·김성현·차유나·김승혜·박지혜·박경선·김리원·서혜란·신애리·정혜정·박성원·배지현·김정동·민지윤·이정민, 『스토킹 방지 입법 정책 연구』, 경기대학교, 2021.
- 정춘숙의원 대표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011746, 제안일 2018. 2. 2.
- 윤후덕의원 대표발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012498, 제안일 2018. 3. 16.
- Philadelphia Code Chapter 9-3200. Entitlement to Leave due to Domestic Violence, Sexual Assault, or Stalking, https://codelibrary.amlegal.com/codes/philadelphia/latest/philadelphia_pa/0-0-0-196966, 접속일자: 2021. 9. 16.
- Stalking Protection Act 2019,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19/9/contents/enacted>, 접속일자: 2021. 9. 16.
- 법률 제14413호, 2016.12.20. 일부개정, 2016.12.20. 시행,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 법률 제14583호, 2017.3.14. 일부개정, 2017.3.14. 시행, 「범죄피해자 보호법」.
- 법률 제16086호, 2018.12.24. 제정, 2019.12.25. 시행, 「여성폭력방지기본법」.
- 법률 제17437호, 2020.6.9. 일부개정, 2020.6.9. 시행,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제17499호, 2020.10.20. 일부개정, 2021.1.21. 시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법률 제17507호, 2020.10.20. 일부개정, 2021.1.21. 시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법률 제17572호, 2020.12.8. 일부개정, 2021.6.9. 시행, 「형사소송법」.
- 법률 제17895호, 2021.1.12. 일부개정, 2021.7.13. 시행,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제18083호, 2021.4.20. 제정, 2021.10.21. 시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4) 미국 미국 필라델피아에서는 근로자가 스토킹 피해와 관련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Philadelphia Code Chapter 9-3200. Entitlement to Leave due to Domestic Violence, Sexual Assault, or Stalking, (https://codelibrary.amlegal.com/codes/philadelphia/latest/philadelphia_pa/0-0-0-196966, 검색일자: 2021. 9. 16.)). 국내에서도 가정폭력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에게 휴가 등을 부여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다가 임기만으로 폐기되었다. (윤후덕의원 대표발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일 2018. 3. 16.; 정춘숙의원 대표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011746, 제안일 2018. 2. 2.